

NEWSLETTER

March 2022

디지털금융팀

Digital Finance Team

CONTACT



변호사 강현구

T: 02.772.4429
E: hyunkoo.kang@leeko.com

변호사 주성환

T: 02.6386.6345
E: seonghwan.ju@leeko.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디지털자산 정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을 법제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규제수준을 넘어,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거버넌스를 수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디지털자산 정책은 독자적인 가상자산 규제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의 합리적 과세, ICO의 단계적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 디지털자산 시장 거버넌스 구축 및 육성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요 내용

개요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인 부당거래(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 수익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및 확대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및 공시제도 도입 등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및 정책기조로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 전환 	<p>「디지털자산 기본법(안)」,</p> <p>「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p>

가상자산 과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정비 후 과세 예정 ■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예정 	「소득세법」
ICO 단계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O를 허용하되,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 <p>* IEO: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 및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p>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자산 시장 거버넌스 구축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II. 시사점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디지털자산 정책은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를 통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부정적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외국환거래 신고, 증권형 디지털 자산 발행 등 기존 법령의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의 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즉,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행, 외환당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외국환신고 수리, 금융당국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 발행을 위한 절차 등에서의 정부 입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NFT, DeFi, 증권형 디지털 자산 규제, 불공정행위 규제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안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도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에 따라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향후 정부 정책 방향 및 국회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발빠르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향후에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과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실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업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뉴스레터를 적시에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사무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우 04532)

판교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3층 (우 13529)

Tel : 02-772-4000 | Fax : 02-772-4001/2 | E-mail : mail@leeko.com | www.leeko.com